

도쿄재판을 통해 본 일본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고코 기요시(郷古潔)를 중심으로—

강 경 자**

keiko84@daum.net

〈 目 次 〉

- | | |
|----------------------------------|--|
| 1. 서론 | 3. 심문조서를 통해 본 미쓰비시 고코 기요시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
| 2. 도쿄재판과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 | 기요시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
| 2.1 도쿄재판과 전범 기업인 처벌에 대한 대일 기본 방침 | 3.1 고코 기요시의 전략폭격조사단과 국제검찰국 심문조사 |
| 2.2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불기소 방침과 사회복귀 | 3.2 고코 기요시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
| | 4. 결론 |

Key word : 도쿄재판(Tokyo Trials), 전범 기업 (War Criminal Entrepreneurs), 전쟁범죄 (War Crimes), 역사 인식(Historical Awareness), 전후 책임(Post-War Responsibility)

1. 서론

이 연구는 도쿄재판 국제검찰국(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IPS)이 생산한 법정 자료를 분석하여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검찰국은 일본 전범 기업인들이 침략전쟁의 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평화에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7705)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일본학

반하는 죄(Crime against peace)”를 범한 A급 전범 용의자로 심문하였으며, 당시 국제검찰국이 전범 용의자들을 심문하면서 생산한 법정 자료들은 일본 침략 전쟁에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검찰국은 도쿄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GHQ의 특별 참모부국으로 설립되었으며, 연합국을 대표하는 11개국 검사들이 일본의 전쟁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전범 용의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기관이다. 국제검찰국은 주요 전범 용의자들의 전쟁범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으며, 전범 용의자들과의 심문 내용을 심문조서로 작성했다. 검찰국이 도쿄재판에 제출한 증거와 조서는 법정 자료 제1호부터 2282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¹⁾ 일본은 패전 직후 군, 정부, 기업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은폐했기 때문에, 국제검찰국의 전쟁범죄 수사 및 심문을 통해 기록된 자료는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진다. 특히 기업인과 관련된 심문조서는 일본 정부와 군부, 주요 기업의 전쟁 협력 및 책임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1차 자료로, 당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 전쟁 자원의 동원 방식, 군수 물자 생산 및 노동력 동원, 기업의 협력 내용 등을 조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다.²⁾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심문조서에 기록된 피고들의 진술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민낯은 기업인의 전쟁범죄 실태를 복원하고, 전범 기업인의 역사 인식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도쿄재판의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 중 미쓰비시중공업의 최고 경영자였던 고코 기요시(郷古潔)의 심문조서를 중심으로 그의 전쟁범죄 및 역사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국제검찰국이 수배한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들 중에서 특별히 고코 기요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전시 경제 하 전쟁 협력 행보가 다른 기업인들과 비교해 독보적이기 때문이다.³⁾ 미쓰이와 스미토모 등을 비롯한 주요 기업

1) 清瀬一郎 (2002) 『秘録 東京裁判』 中央公論新社 p.61

2) 宇田川幸大(2018) 『考証 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p.31-32

3) 총 16명의 기업인들이 국제검찰국에 의해 체포, 수배되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코 기요시(郷古潔),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 후

의 경제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고코 기요시는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한 정책 결정과 전시 경제 기획에 깊숙이 개입하여 경제를 전쟁 수행의 도구로 전환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군국주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며 미쓰비시를 일본 최대 군수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무사시(武藏)급 전함, 1만 개 이상의 어뢰, 제로센 전투기 등을 대량 생산하며 일본군의 실질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했다. 또한 대정익찬회 생산확충위원장, 도조 내각 및 군수성 고문을 역임하며 전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독보적인 전범 기업인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검찰국 역시 다른 전범 기업인들보다 고코 기요시의 경제정책 입안과 실행에 주목하며, 그가 일본 제국의 전시 경제와 군국주의 체제를 지원·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했다.

무엇보다 미쓰비시는 현재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동아시아 내 역사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일본 전범 기업의 전후 책임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역사 인식과 직결된 사안이며,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 이 논문은 고코 기요시에 주목하여 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도쿄재판의 법정 자료를 바탕으로 전범 기업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전후 역사의 원점으로 돌아가 전범 기업의 전후 책임 문제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도쿄재판의 법정 자료는 단순한 전범재판의 산물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국제법과 전쟁 책임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전후 사상의 출발점’이자 ‘전쟁의 귀결점’으로 평가받는 도쿄재판의 법정 자료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전범 기업과 기업인의 전쟁범죄 및 역사 인식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⁴⁾ 도쿄재판의 법정 자료가 가지는 학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도쿄재판 자료를 1차 자료로

루노 이노스케(古野伊之助), 이케다 시게아키(志田成彬), 이시하라 히로이치로(石原広一郎), 무라타 쇼조(村田省藏), 나가지마 지쿠헤이(中島知久平), 쇼리키 마사타로(正力松太郎), 쓰다 신고(津田信吾), 오코치 마사토시(大河内正敏), 오구라 킨모치(大藏公望),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 오구라 마사쓰네(小倉正恒), 호시노 나오키(星野直樹),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4) 日暮吉延(2018) 『東京裁判と国際政治』 『外交史料館報』 31 p.1

활용한 전범 기업인의 역사적 책임과 전쟁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범 기업인의 연구를 국제검찰국이 생산한 심문조서에 기초하여 실증적 차원에서 시도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연구가 그간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도쿄재판의 국제검찰국 심문조서 및 관련 자료들이 오랫동안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일반에게 비공개되어있고, 연구자들도 이러한 1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쿄재판 관련 자료는 연합군 점령 종료 후 미국으로 이관되어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보관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1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도쿄재판 관련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었고, 현재는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과 일본 외무성 외교자료관에서 완전히 공개되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제 일반에게 완전히 공개된 국제검찰국의 심문조서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전범 기업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역사 갈등의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 및 건강한 한일 관계 구축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일본기업의 책임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연구한 신희석의 연구-신희석(2011) 『일본기업의 국제법적 책임-2차대전 중 국제인권규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는 일본 정부의 책임론 뒤에 은폐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도쿄재판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아니다.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와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본 보수정치인들의 담화나 정책연설과 국회 발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발표된 합의나 성명 및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새역모, 일본회의와 같은 우익단체나 야스쿠니신사 문제, 대동아전쟁론, 천황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전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2. 도쿄재판과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

2.1. 도쿄재판과 전범 기업인 처벌에 대한 대일 기본 방침

도쿄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IMTFE)은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개정된 국제전범재판소 재판이다. 이는 카이로선언, 알타회담을 비롯하여 포츠담 선언, 극동위원회 등의 국제 조약과 회의를 통해 거듭 천명된 일본의 전후 책임 규명, 국제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응집되어 설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⁶⁾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도쿄재판의 기획부터 개정까지, 전범 체포, 처벌 방침을 비롯하여 판결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미국의 SWNCC(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와 GHQ의 대일점령정책이었다. 미국의 SWNCC는 1944년 11월 전후 질서 형성을 위해 미국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간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다. SWNCC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최고사령관(SCAP)이 이끄는 GHQ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일정책의 주요 지침을 수립하였고, SWNCC의 결정은 GHQ를 통해 일본에서 실행되었다.

SWNCC는 57/3 “The Apprehension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Japan) (전범 체포 및 처벌(일본))”과 57/12 “Directive on the Apprehension, Trial and Punishment of War Criminals in the Far East, Prepared on the Basic of Policy Decision taken by the Far Eastern Commission (극동 전범의 체포, 재판 및 처벌에 관한 지침, 극동위원회가 취한 정책 결정의 기본에 따라)” 등의 지침을 통해 전범 처벌 방침 및 도쿄재판의 설립과 운영의 방침을 제시하였고, 1946년 1월 19일 GHQ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특별선언과 함께 일반명령 제1호로 <극동국제군사재판소헌장>을 공포하면서 도쿄재판은 개정되었다. 따라서 SWNCC와 GHQ의 도쿄재판 관련 문서군은 도쿄재판의 개정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전범 처벌 방침의 구체적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6) Comyns-Carr, A. S. (1949) “The Tokyo War Crimes Trial” *Far Eastern Survey*, 18(10), pp.5-6

한편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이 도쿄재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실은 도쿄재판이 정치적 양면성을 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도쿄재판이 국제전범재판으로서 국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범재판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의 수단으로 정치적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⁷⁾ 이는 도쿄재판이 전범 처벌 및 판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양면성은 특히 전범 기업인 및 경제계 엘리트들에 대한 처벌 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초기 전범 기업인과 경제계 엘리트의 처벌 방침은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의 초기 대일정책’을 명시한 SWNCC의 150시리즈 문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 SWNCC 150/2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일본의 항복 후 초기 정책)’(1945년 8월 12일)은 그 목표를 일본이 다시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조성하여,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군사 장비, 시설은 파괴되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핵심 산업은 박탈될 것이며 군사적 성격이 강한 산업과 공직 또는 중요한 민간 직책에서 군사적 민족주의와 침략을 주장한 인물들은 제거될 것이라고 하였다.⁹⁾

이 지침은 SWNCC 150/4 ‘Basic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일본의 항복 후 기본 초기 정책)’(1945년 9월 6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었다. SWNCC 150/4에서는 대일 점령 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일본이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거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미국을 위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최우선적 목적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일본은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비군사화될 것이다. 군국주의자의 권력과 군국주의의 영향력은 일본의 정치, 경제 및 사회 행위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범을 ‘최고사

7) 日暮吉延(2018) 『東京裁判と國際政治』 『外交史料館報』31 pp.1-5

8) SWNCC의 150시리즈 문서들은 1945년 8월 11일부터 1947년 2월 18일까지에 걸쳐 발표된 미국의 대일점령정책 문서군이다. 150/0-10까지 있으며, 일본 대일점령정책의 목표와 수단, 전략과 구체적 실행 전략들에 대한 세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9) SWNCC 150/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ume VI Document 395

령관 또는 적절한 유엔 기관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된 자'라고 함으로써, 전범을 특정할 수 있는 권한이 최고 사령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¹⁰⁾ 이처럼 초기 대일점령정책의 핵심은 일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군국주의 영향력을 일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SWNCC 150 문서 시리즈를 통해 엿볼 수 있는 미국의 일본 경제인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전시 경제를 주도한 주요 기업 및 경제 엘리트들이 군국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전쟁 자원을 조달하며,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협력한 기업과 재벌에 대한 해체, 전쟁 중 경제적 이득을 취한 기업인의 책임 추궁 및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GHQ 역시 전쟁 경제를 지탱했던 인사들의 활동을 “전쟁을 가능케 한 주요 원인”으로 간주하였고,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일본의 비군사화 및 재건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1945년 11월 6일에 발표된 SCAPIN-243 “APPREHENSION OF SUSPECTED WAR CRIMINALS(전쟁범죄 용의자 체포)”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명령에는 일본의 전쟁경제를 지탱했던 주요 인사, 군수 산업 관계자,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 및 재정 책임자, 일본의 자원 동원 체계를 계획하고 실행한 관료 및 기업인, 정책 입안자, 행정 책임자 및 기타 전쟁경제 지원 인사들을 전범으로 특정하고 체포하도록 명했다.¹¹⁾

이러한 지침에 기초하여 전범 기업인에 대한 체포가 1945년 11월 19일부터 1945년 12월 6일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닛산, 미쓰비시, 나카지마 비행기 등 군수 물자 생산 및 전쟁 수행을 지원한 기업의 설립자, 경영진, 경제관료, 경제적 선전과 자금 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언론계 인사들

10) SWNCC150/4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ō/01/022/022tx.html>

11) 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s)은 GHQ 최고사령관의 구체적 정책 집행 명령서로서, 이 명령에는 도쿄재판 실행 과정에서 전범 체포, 심리 절차, 일본 정부의 협조 명령 등이 포함되었다. SCAPIN-243: APPREHENSION OF SUSPECTED WAR CRIMINALS 1945/11/06 <https://dl.ndl.go.jp/pid/9885307/1/1>(文書名: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Directives to the Japanese Government (SCAPINs) = 対日指令集)

과 금융계 인사들이 체포되었다.¹²⁾ 이는 일본의 전쟁 수행에 기여했던 경제 엘리트와 군수 기업을 비롯한 일본 경제계가 군국주의와 전쟁에 깊이 관여했음을 미국 측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기업의 역할이 간접적이더라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범죄를 지원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인식은 뉘른베르크재판에서의 전범 기업인들에 대한 인식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¹³⁾

2.2 A급 전범 용의자 기업인의 불기소 방침과 사회복귀

초기 대일점령정책의 분위기는 국제사회 냉전의 심화와 함께 변화를 보이게 된다. 1947년 이후 미국과 소련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1947년 9월 18일 국가안전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NSC(National Security Council)를 설립하였고,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NSC 주도로 전환되었다. NSC 설립 이후, SCAP의 자율성은 점차 제한되었으며, NSC의 중앙집권적 외교·안보 정책 지침에 따라야 했다. SWNCC와의 관계에서 SCAP는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권을 맡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NSC의 등장으로 SCAP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한되고 강력한 NSC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했다.

이러한 정책 변환의 흐름과 함께 1947년 8월 28일 워싱턴에서는 국제전범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는 지시를 하게 된다. 이에 1948년 1월 13일 맥아더의 지시에 따라 도쿄재판에 기소되었던 28명의 피고인 이외 구금되어 있던 약 60명의 A급 전범 용의자들은 대부분 석방되고 1948년 11월 12일 도쿄재판은 폐정하게 된다.¹⁴⁾ GHQ 법무국은 당초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를

12) 2차, 3차 체포 명령으로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 닛산(일본산업) 설립자를 비롯해 고코 기요시(郷古潔),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 후루노 이노스케(古野伊之助), 이케다 시게아키(志田成彬), 나카지마 지쿠헤이(中島知久平), 무라타 쇼조(村田省藏), 오구라 마사쓰네(小倉正恒),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고바야시 이치조(小林一三)와 같은 경제인들이 체포되었다.

13) Kluger, B. F. (1971). "The Nuremberg trials and the German industrialists." *Journal of Modern History*, 43(4), pp.651-666; Ratner, S. R. (2001). "Nuremberg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Yale Law Journal*, 111(2), pp.443-527

14) 日暮吉延(2008) 『東京裁判』 講談社現代新書 pp.292-294

비롯한 12명의 각료들에 대해 단독 후속 군사재판을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이는 실행되지 않은 채 1948년 12월 24일 모든 A급 전범 용의자들이 석방되었다. 독일과 같은 후속 재판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¹⁵⁾

이러한 도쿄재판 폐정 및 경제 전범 용의자 석방 조치는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 지침과 무관하지 않았다. 1948년 10월 NSC 13/2 “Recommendations with Respect to U.S. Policy toward Japan(일본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한 권고)”의 문서를 보면, SCAP의 권한을 일본 정부의 손에 더 많이 이양해야 하며, SCAP의 작전 범위를 가능한 한 신속히 축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 회복은 일본에서의 향후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하며, 공직자 및 경제인들의 숙청을 멈추고 수정해 나가야 함을 지시하고 있다. 숙청 대상 중에서 비교적 무해한 직책을 맡았던 자들은 정부, 기업, 대중 매체 직책에 다시 자격을 얻도록 지시하고 있다.¹⁶⁾

이러한 방침들은 경제 활동을 제한했던 기업인들을 복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하였고, 군수 기업 경영자와 경제사범에 대한 기소 철회와 석방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SCAP는 이와 같은 대일점령정책에 발맞추어 경제 제재,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경제 및 산업계의 중요 인물들이 일본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으로 전환하게 된다.¹⁷⁾

더 나아가 1951년 9월 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은 일본 주권 회복과 함께 전범 혐의로 구속되었던 주요 경제계

15) 田中利幸(2013) 『再論 東京裁判: 何を裁き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 大月書店 p.111

16) NSC 13/2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ume VI Document 588

17) SCAPIN-1358: Clarification of Status of Former Suspected War Criminals(1946년 11월 23일)와 같은 지령이 1946년 말부터 1948년에 걸쳐 수없이 공포되었다. SCAPIN-4452-A: Clarification of Status of Former Suspected War Criminals, SCAPIN-4326-A: Removal of Certain Individuals from Lists of War Crimes Suspects, SCAPIN-5229-A: Clarification of Status of Former Suspected War Criminals와 같은 지령들은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가 일본 내 전범 혐의자들의 신분과 관련된 지침을 명확히 하면서, 전범 혐의자로 체포되었던 인물들 중 전쟁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추가 조사 후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한 전쟁범죄 용의자 목록에서 특정 개인 삭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인사들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허용하면서, 일본 전범 용의자 기업인들이 전후 책임을 지지 않고 전후 일본 경제를 지배적으로 이끌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강화조약은 강력한 냉전 전략 속에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성격을 이미 상실하였다.¹⁸⁾ 강화조약 이후 일본은 미국의 지원 속에 급속히 경제를 재건하며 전후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전범 기업들이 경제 재건의 선두에 섰다. 조약은 일본의 전쟁 책임을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범 기업과 경제 엘리트들이 피해 보상과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 물산 등 전범 기업들은 전후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은 채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될 수 있었다. 강화조약은 전범 기업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고, 재벌 체제의 부활을 가능케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킨 정책은 1952년 8월 7일 승인된 NSC 125/2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Japan (일본에 대한 미국의 목표 및 행동 방침)”이었다. 이 문건에서는 미국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특히 일본이 공산주의 영향에 저항하고, 자유로운 국가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하고 있다.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며, 일본산업 재건 및 무역 확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미국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재건의 지원 아래 미쓰비시의 A급 전범 용의자 고교 기요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인, 경제계 엘리트들은 전쟁 범죄의 낙인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전후 책임의 무거운 짐도 벗어버린 채 일본의 경제 재건과 민간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화려하게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18) 荒井信一(2005) 『戦争責任論-現代史からの問い』 岩波書店 p.210

19) NSC 125/2. Washington, August 7, 1952.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Japan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2-54v14p2/d588>

3. 심문조서를 통해 본 미쓰비시 고코 기요시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3.1 고코 기요시의 전략폭격조사단과 국제검찰국 심문조서

고코 기요시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일본 제국의 전시 경제와 군국주의 체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국제검찰국이 수집한 File NO.219 고코의 자료에 기초하여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코 기요시는 일본 제국의 전시 경제 체제를 설계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미쓰비시 그룹의 중심적인 지도자로 활약했다. 1908년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쓰비시 그룹에 합류하여 1934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전무이사로 임명되었고, 1941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미쓰비시 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를 전시 경제 체제에 맞게 재편하여, 전투기, 군함, 탱크 등 군수물자의 생산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고코는 기업 경영에 그치지 않고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1943년에는 항공산업협회 부회장과 국가총동원법위원회 이사로 임명되었으며, 제국 협력회 이사와 내각 고문직을 맡아 전시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했다. 1944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이사회 의장과 기술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대정익찬회의 중심인물로 활약했다. 또한 일본 산업협회 부회장으로도 임명되어 민간 기업과 정부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는 일본 군수성 설립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일본의 전쟁 지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의 전쟁 수행 역량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고코의 활동은 일본 제국의 군수 산업 발전과 전시 경제 체제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전시 경제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²⁰⁾

이러한 고코의 주요 혐의 내용은 고코가 일본의 산업계 지도자들 중에서도 특히 군부 정책과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한 인물이었다는 점, 군부와의 통합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며, 도조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1942년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일본산업의 군사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인물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²¹⁾ 그리고 그의

20) File NO.219, 1946.04.02. pp.1-3

21) File NO.219, p. 8 파일: 제목 :고코 기요시 날짜:1946년 1월 17일, 보고서: D. L. Waldorf

체포 이유는 다른 산업 지도자들이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거부했을 때, 고코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전시 정책을 지원하며 산업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제국 협력회의 이사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그의 역할은 일본의 공격적 침략 전쟁 정책을 산업계에서 뒷받침한 주요 인물로 평가되어 전범 혐의로 체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명시되어 있다.²²⁾

현존하는 공개된 전범 용의자로서 고코 기요시 관련 심문조서는 미국 USSBS (전략폭격조사단)에 의해 이루어진 1건의 심문조서와 국제검찰국에 의한 심문조서 4건이 있다. USSBS는 1944년 설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폭격 작전이 일본 및 독일의 산업, 경제, 전쟁 수행 능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 임무로 했던 미 정부 기관이다. USSBS는 전후 전쟁 지도자와 산업 지도자들을 심문하여 일본 경제와 산업 구조, 군사 자원의 활용, 전쟁 수행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USSBS의 심문 대상은 일본의 산업, 경제, 군사, 정치지도자들이었으며, 일본의 주요 기업인, 군수성 관료, 군 지도자들이 USSBS의 심문 대상이었다. 고코는 일본의 군수 산업에 기여한 기업인이자 군수성 관료로서 심문 대상이 되었다.

고코의 USSBS의 심문 조서는 *Interrogation of Goko, Kiyoshi, Serial No. 381. Report No. 2-r*의 이름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²³⁾ 이 심문은 1945년 10월 29일 도쿄 미도리 회관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코의 직책과 역할,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전략적 계획 및 협력 과정, 전쟁 말기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영향을 심문관과 고코 기요시 간의 질의응답 형태로 기록한 조서이다. 이 심문조서의 특징은 고코가 전시 하 경제 정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는 관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 국책회의 부회장, 항공산업협회 회장, 내각

22) 파일 219 기록용 메모 (MEMORANDUM FOR THE RECORD)”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고코 기요시는 1945년 12월 1일 체포 명령을 받았으며 AG 383.7 문서(45년 12월 1일) “일본인 인사의 체포”에 근거한다. OCO(점령군 지휘 명령)의 권고에 따라 체포되었다.

23) *Interrogation of Goko Kiyoshi, Serial No. 381. Report No. 2-r, USSBS Index Section 8* (文書名: Records of the U.S. Strategic Bombing Survey; Entry 43, USSBS Transcripts of Interrogations and Interrogation Reports of Japanese Industrial,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s. 1945-46. <https://dl.ndl.go.jp/pid/4011601>

자문위원회와 중앙 협의회는 핵심 일원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1944년 10월 27일 군수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그 계열사에게 일본의 전쟁 노력, 특히 항공기 생산에 대한 뛰어난 공헌을 인정하며 감사장을 수여한 이력까지 수집하여, 그가 전시 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 및 정치, 군부, 경제의 전략적 협력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국제검찰국이 생산한 고코의 심문조서는 총 4건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고코 기요시의 국제검찰국의 심문조서는 4건이지만, 주요 심문조서는 Exhibit No. 517이며, 나머지는 복사본과 요약본이다. 또한 File NO.219는 고코 기요시의 심문관 하우스허스트 (Henry A. Hauxhurst)가 작성한 심문조서 요약문을 비롯하여, 증거서류 No. 517의 복사본, 고코의 인사 기록 및 전범 체포 명령 파일부터 석방 명령, 일본어의 번역 표기법 메모에 이르기까지 고코 기요시의 심문조사 과정에 활용된 기록과 자료가 빠짐없이 수집, 보관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 국제검찰국의 고코 기요시 심문조서 기록

심문조서	제목	조사시기	중점 내용
Exhibit No.652	Personnel Records of GOKO, Kiyoshi	1946년 1월 9일	고코 기요시의 인사 기록 복사본.
Exhibit No.518	Steno Notes of the Interrogation of GOKO, Kiyoshi	1946년 2월 12일	속기로 기록되어 있는 심문조서 요약본
Exhibit No.517	Transcript of the Interrogation of GOKO, Kiyoshi	1946년 3월 12일	전쟁 중 산업 협력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한 심문
Case File NO.219	FILE NO. 219, RE:GOKO, Kiyoshi	1946년 4월 2일	고코 관련 증명서, 이력 및 심문조서에 대한 브리핑

따라서 고코의 심문조서는 USSBS의 심문조서와 Exhibit No. 517 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심문조서의 심문 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나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각 심문조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요 심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고코의 심문조서 내용을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2 고코 기요시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

국제검찰국이 고코와 같은 경제인을 전범 용의자로 심문한 이유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기업인들이 전시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는 “전시 경제 계획 및 실행 (Economic Planning and Execution of War-time Policies)”이라는 범죄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검찰 측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심문한 부분은 피고 기업인들이 정책 결정 기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규명하는 것이었다.²⁴⁾ 이를 통해 전범 기업인이 군부 및 정계 인사들과 협력하여 전쟁을 수행한 구조와 역사적 책임을 규명하고, 전쟁 체제를 지원한 경제인들을 처벌함으로써 전쟁의 도덕적, 경제적 범죄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²⁵⁾

그러나 국제검찰국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심문조서에 나타난 고코의 진술은 거짓 주장과 변명, 책임 회피로 일관되었다. 고코의 심문관이었던 하우크허스트는, 고코와의 심문 내용을 최종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GOKO 씨는 심문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았으며, ...유죄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된 진술도 하지 않았다.”²⁶⁾ 고코는 자신이 전시 하 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과 책임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의 전쟁 협력 범죄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진술은 회피하였거나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고코는 1946년 4월 12일, A급 전범 용의자로 수감되어 있던 스가모 형무소에서 도쿄재판에 회부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석방될 수 있었다. ²⁷⁾ 심문관 하우크허스트는 1946년 3월 14일자 조서에

24) 데이비ッド·코어엔, 戸谷 由麻 (2018) 『東京裁判「神話」の解体』ちくま新書 p.216

25) HAUXHURST, H. A., CUNNINGHAM, O., WENNERSTRUM, C. F., & BRAND, J. T. (1948). FORUM ON WAR CRIMES TRIALS. Proceedings of the Section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pp.32-35

26) File NO.219 p.13. NAME OF INTERROGATOR: H. A. HAUXHURST SUBJECT: GOKO, Kaiyoshi SUMMARY OF EVIDENTIARY FACTS

27) AG 000.5APO 500 1946년 4월 12일 주제: 구금된 전쟁범죄 용의자 석방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 하시모토 모리마사 왕자(Prince Morimasa HASHIMOTO) 고코 기요시(Kiyoshi GOKO) 석방 통보.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사실상 고코에 대한 심문을 종결했다.“미국 전략폭격조 사단의 1945년 10월 29일(심문 번호 381)의 심문 결과와 종합된 이번 심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고코 씨가 전쟁 범죄자로 분류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이 기록은 고코의 전쟁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심문 절차의 종료를 알렸다.²⁸⁾

고코에 대한 심문은 그의 정치적 역할과 전시 경제 정책 결정에서 군 수뇌부 및 정·재계 간 협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즉 고코의 주요 혐의 내용 중 하나가 군부와의 긴밀한 협력, 도조 정치권과의 밀접한 관계, 선거 자금 지원 등이었던 만큼 관련 심문은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와의 친분, 내각 고문으로서의 역할, 미쓰비시가 전쟁 물자 계약을 누구와 거래했는지 군수품 생산과 납품의 군수뇌부와의 거래 구조, 만주 수립과 중일전쟁에 대한 고코의 인식을 묻는 심문이 주된 내용이였다. ²⁹⁾

여기에서는 상기 네 가지 주요 질의에 고코는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고코의 진술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교차분석하면서 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도조 히데키와의 개인적 친분을 묻는 심문에서 고코는 도조와의 관계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내각 고문이 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이 있었으나, 내각 고문이 된 것은 서기관 호시노의 요청으로 되었으며 도조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³⁰⁾ 이는 그의 심문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타난 그의 이력과 완전히 대치되는 것이었다.

심문조서 파일 219에는 고코가 도조의 1942년 선거 자금을 지원했으며, 1943년에는 도조 내각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전시 산업화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정치적 연관성 또한 주목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또한 상기 파일에는 고코는 1943년 3월 19일 일본 내각의 자문위원회 7명 중 한 명으로

28) File NO.219 p.41 심문 종료 보고서(Henry A. Hauxhurst)

대상: 고코 기요시 날짜: 1946년 3월 7일

결론 현 상황에서 고코를 전범으로 기소할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서명: Henry A. Hauxhurst

29) Exhibit No.517 심문조서의 주된 질문 내용

30) Exhibit No.517 p.7

31) 파일 219. p.8 제목: 고코 기요시 날짜: 1946년 1월 17일 보고서: D. L. Waldorf

지명되었으며 이 자문위원회 설립은 도조 총리가 직접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다.³²⁾ 이처럼 고코는 도조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조 내각에서 내각 고문이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시 경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심문 종료 보고서>의 내용 중에 “그는 도조 히데키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도조가 총리로 있을 때 1943년 3월에 고코가 내각 고문단에 임명되었음에도 친밀한 접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도조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³⁾

또한 내각 고문으로서의 활동에 관련된 심문에서 자신은 내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혀 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³⁴⁾ 도조 히데키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 정책과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핵심적 인물이었다. 도조 내각은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총력전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했으며, 전쟁 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1943년 11월에 군수성을 설립했다. 그런데 고코는 1943년 3월 내각 자문위원회 위원이 되고, 내각 고문으로서 활동하면서 군수성의 설립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군수성은 전쟁 물자 생산의 중앙 관리 및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핵심 산업은 항공산업이었다. 따라서 1943년 그가 고문으로 일하기 시작한 해 군수성이 설립되었고, 동시에 군수성의 핵심 산업인 항공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일하게 된 것은 부정하기 힘든 개연성이 있다. 무엇보다 내각 고문의 역할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조언을 제공하며, 내각 구성원들과 논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핵심적인 임무인 만큼 그가 내각에서 내각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고코는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각 고문으로서의 전시 정책 결정의 공식적 역할을 부정하며 자신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거짓 진술을 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코는 다른 질의에 답하면서 도조와의 친분과 전시 경제 정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 고코가 1940년에 당시 고노에 내각의 육군대신이었던 도조를 만나 경제 조직 수립에 대한 의견을

32) 파일 219. 서류 번호:1641. 출처: New York Times, 1943년 3월 19일

33) 파일 219. p.41 심문 종료 보고서 (Henry A. Hauxhurst)의 보고 내용 중

34) Exhibit No.517. p.9

전달하고 기업 통제에 대한 경제 개혁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이다.³⁵⁾ 이것은 1943년 내각 고문으로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고코는 도조와 개인적으로 만나 전시 체제 하 기업 통제에 대한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도조와 만난 시점이 1940년이라는 점을 볼 때 그가 논의한 내용은 1941년 기업정비령 관련 내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정비령은 일본의 전시 경제 체제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들이 재벌 계열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강제한 법령이었다. 군수 산업에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해 민간 기업을 통제하고 대규모 재편, 통합하게 한 법령이었던 것이다. 이 법령으로 미쓰비시는 경제 통제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대표적 군수 기업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³⁶⁾

이러한 경제 개혁 관련 논의를 1940년에 도조와 했다는 것 자체가 고코가 내각 고문으로서 활동하기 이전부터 도조와의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의 정치적 입지를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총동원법위원회 이사, 제국 협의회 이사, 대정익찬회에서 활동 등의 모든 이력이 그가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전시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임을 입증하고 있다. 국가총동원법위원회, 제국 협의회, 대정익찬회는 모두 전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들로, 정부와 군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기구들이었다. 이들 기구에서 활동한 이력은 그가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전시 정책 결정 및 수행에 깊이 관여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고코는 완강하게 도조와의 개인적 친분 및 모든 정치적 활동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의 이력은 그의 진술이 거짓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미쓰비시가 일본 정부와의 전쟁 물자, 선박, 어뢰 또는 기타 물자 계약은 누구와 거래했는지, 미쓰비시가 주요 군수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거래에 관한 심문에서 고코는 해군과 육군의 수뇌부와 거래한 적이 없고, 거래 대상은 해군과 육군의 “산하 부서장”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³⁷⁾ 일본 군수

35) Exhibit No.517 p.2

36) Bisson, T. A. (1945) “The Zaibatsu’s Wartime Role” *Pacific Affairs*, 18(4) p.356; 矢野久(2008) 『日本の植民地労働者の強制労働』 『三田学会雑誌』 100-4 pp.115-116

37) Exhibit No.517 p.8

계약 체계는 군수 기업이 군수성 및 육군, 해군의 고위급 관리와 직접 협력해야 했으며 군수품 제조와 관련된 주요 계약과 자원 배분은 고위 장군들이 승인하고 조율했기 때문에, “산하 부서장” 차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고코의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군부의 주요 무기 공급처로서 군수뇌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 속에서 군수품의 제조와 공급을 조율하면서 거래를 해왔다. 그러나 자신이 군 수뇌부와의 직접적 거래를 인정하면 전쟁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를 낮은 직위의 부서장 수준의 관료로 한정하여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진술 역시 철저히 자신의 전쟁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거짓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고코의 거짓 진술은 만주국 수립과 중일전쟁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심문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심문관 하우크허스트는 고코와의 심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만주국 관련 심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는 만주국 정부의 독립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으며, 만주국 정부의 수립이 국제연맹 규칙에 어긋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중국 사태 이후 중국으로의 병력 투입에도 반대했으며, 중국 사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및 정부 절차와 관련하여, 그는 평화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이 추가 병력의 파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중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를 매우 원했다고 진술하였다.”³⁸⁾

1932년 만주국 설립은 일본 정부와 군부가 추진한 경제적·군사적 확장 전략의 일환이었다.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대기업들은 만주국 설립과 진출에 깊이 관여했으며, 만주의 광업, 철도, 전력, 화학, 군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미쓰비시는 광산 개발 및 철도망 확장,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설립, 물자 운송과 지원 착취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런데, 만주국 설립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미쓰비시의 최고 경영자가 만주국 수립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당시 만주에서의 미쓰비시의 실질적 입지 및 활동과 큰 괴리를

38) File NO.219, p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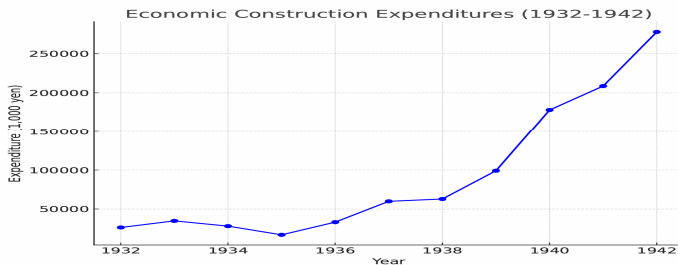
SUMMARY OF EVIDENTIARY FACTS

MADE BY: Henry A. Hauxhurst

보이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고코의 진술에서 심각한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 중 하나는, 일본의 만주 점령이 일본 경제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일본보다 만주가 더 큰 영향을 받아 산업이 발전했다는 주장이다.³⁹⁾ 한마디로 일본의 개발 정책으로 만주 산업이 성장했으며, 만주 자체가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게 자원과 노동을 수탈당했던 만주의 경제 상황으로 보아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만주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비숙련 노동자 최하위 계층의 급여보다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으며 항상 기아와 탈진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⁴⁰⁾

<도표 2> 만주의 경제건설 지출 비용 그래프



상기 그래프는 구라모토(Yukiko Kuramoto)의 논문 속에 나오는 데이터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만주국 설립 이후 만주국의 경제건설 지출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건설을 위한 지출이 1932년 대비 1942년에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전략적 필요와 전쟁 준비에 따른 중공업 및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결과이다. 일본은 만주의 석탄, 철광석, 금 등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채굴하고 만주의 자원으로 일본 군수 산업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건설했다.⁴¹⁾ 즉, 경제

39) RG243. Records of the U.S. Strategic Bombing Survey 1945.10.29.INTERROGATION NO.381 Interrogator: Mr. Paul A. Baran, Mr.Thos.A, Bisson p.3(381-3)

40) Emer O'Dwyer. (2017). *Japanese Empire in Manchuria*. In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Asi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p.11

41) Yukiko Kuramoto (201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Manchuria: Japan's Colonial

건설을 위한 지출 비용과 개발 혜택은 만주 지역의 주민들이 아닌, 일본과 일본 군수 기업에 귀속되었다. 이는 <도표 3 군수품 주문과 공급(1939-1945)>에서 군수품 제도가 중일전쟁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허버트 P. 빅스(Herbert P. Bix)는 만주에서의 일본 경제 활동이 군국주의와 전쟁 경제 체제의 기반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 대기업이 식민지 경제 구조의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이 만주의 천연자원을 독점하여 대기업의 산업화를 추진하였으며, 일본인 거주민과 만주 지역 주민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극심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⁴²⁾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수탈과 억압적 통치 속에 만주 개발의 혜택은 일본 본국과 일본 기업에게 집중되었고, 만주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착취와 억압을 경험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것이다. 고코의 발언은 일본의 만주 점령이 가져온 경제적 수탈과 억압적 통치의 실태를 외면하며, 기업의 자원 독점과 노동력 착취와 같은 범죄 및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일전쟁에 대한 심문에서도 고코의 진술은 침략 전쟁의 불법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무감각, 의도적인 무지 전략으로 일관되었다. 그는 중일전쟁상태를 알지 못했으며, 중일전쟁은 일본의 계획적 행동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어쩔 수 없는 “모멘텀”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⁴³⁾ 중일전쟁은 명백히 일본 군부의 계획된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⁴⁴⁾ 일본은 이미 만주사변 이후부터 중국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강화해 나갔다. 군사적 확장은 경제적 자원 확보가 주요 동기였으며, 만주와 중국 본토의 자원 착취는 일본 전쟁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⁴⁵⁾ 관동군과 일본 육해군은 이미 만주를 장악한 후, 중국 본토로의

Economic Development Policy” 紀要社会学·社会情報学 第28号 p.76

42) Bix, H. P. (1972).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anchurian Economy, 1900-31.” *The China Quarterly*, 51, pp.425-443

43) USSBS p.3(381-3), Exhibit No.517 p.4

44) Gordon, D.M. (2006) “The China-Japan War, 1931-1945”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70(1), pp.139-142

침략을 위한 전쟁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였으며, 제국의회는 1930년대 중후반 지속적으로 임시 군사비를 승인하며, 전쟁 준비를 지원했다.⁴⁶⁾ 1936년 제국 국방방침의 개정으로 대규모 군비증강과 중국 및 미국과의 전쟁 계획이 현실화되었고, 노구교 사건을 계기로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중일전쟁은 일본 군부가 계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여 전면전으로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⁷⁾ 따라서, 고코가 주장하는 어쩔 수 없는 자체적인 “모멘텀”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처럼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고코의 중일전쟁 관련 주장은 자신의 전쟁 연루 책임을 은폐하려는 거짓 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중일전쟁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병력 투입에도 반대했으며, 중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를 매우 원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당시 일본 정부와 군부, 그리고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 관계 및 고코의 역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반하트(Michael A. Barnhart)는 미쓰비시와 같은 일본의 군수 경제가 중국과 만주에서의 자원 착취를 기반으로 하여 침략 전쟁을 계획적으로 지원했음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침략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경제적 동기가 중요한 요소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⁸⁾ 비슨(Bisson)은 미쓰비시와 같은 재벌이 군수 산업을 주도하며 일본 군부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이 군부를 압도하는 정책적·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며 경제적 이익과 사업 확장을 위해 전쟁을 지원하는 계획을 강요했다고 분석하였다.⁴⁹⁾ 이처럼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중일전쟁은 기업의 자원 수탈과 경제적 확장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강력히 작용한 침략 전쟁이었

45) Lee, S. H. (2015) “The Japanese Empire at War, 1931-1945”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World War II*. pp.39-45

46) 안재익(2023) 「중일전쟁의 개전과 1930년대 동아시아 국제정치」 『일본역사연구』pp. 160-164; 윤현명(2021)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 분석-제국의 회에서의 논의 를 중심으로-」 『군사』119 pp.83-89

47) 박영준(2023) 「미국과 일본 간 태평양전쟁 개전과정 재조명, 1906-1941: 패권전쟁 발발의 다층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63-2 pp.110-111

48) Barnhart, M.A. (1987) *Japan Prepares for Total War: The Search for Economic Security, 1919-1941* Cornell University Press. pp.64-90

49) Bisson, T.A. (1945). “The Zaibatsu’s Wartime Role.” *Pacific Affairs*, 18(4), pp.355-368

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침략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고코의 주장은 당시 만주에서의 자원 착취를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 확장을 꿈꾸며 중국의 자원 침탈을 위해 침략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고코의 미쓰비시 행적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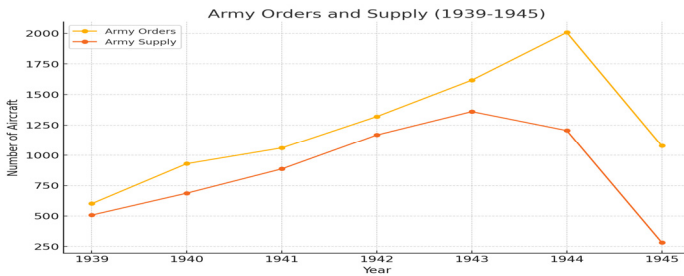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코의 중일전쟁에 대한 진술을 심문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고코는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자원을 획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냐는 심문에 일본 경제의 정점은 한커우 함락 시기이며, 중국의 자원은 일본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주창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모르고 남양 제도와 일본 간의 무역을 촉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에 관심이 있다고만 하고 있다.”⁵⁰⁾

고코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진술이었다. 첫째로, 고코는 일본 경제의 정점을 “한커우 함락 시기(1938년)”가 일본 경제 능력의 정점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일본 경제의 실제 발전 과정 및 미쓰비시의 경제 성장 규모를 생각해 볼 때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

아래의 도표는 파일 No.219에 수록되어 있는 38, 39 파일의 데이터 내용을 그래프화로 시각화한 것이다. 일본 경제는 군수 산업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며 43년 전후로 경제 정점을 이루었다. 이는 중국 자원 착취와 동남아 점령지의 자원 확보 덕분이었다.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 제조가 1943년까지 고도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며, 1944년에는 군의 주문은 급격하게 늘었으나,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45년에 급감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수품도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커우 함락 시기를 경제 정점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자원이 일본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미쓰비시가 중일전쟁 이후 중국의 석탄, 철광석, 식량,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여 침략 전쟁을 지원한 사실은 은폐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50) Exhibit No.517 p.5, 381-4, 5

<도표 3> 군수품 주문과 공급(1939-1945)



또한 고코의 진술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남양 제도와 일본 간의 무역 촉진”으로 축소하고, 그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도 역사적 사실과 먼 주장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 식민주의로부터 해방 시키겠다는 명분 아래, 침략 전쟁과 지배를 정당화한 군국주의 슬로건이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전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실현하려는 도조 내각의 이념적 기반이기도 하였다.

당시 도조 내각의 고문이자 대정익찬회 및 제국협력회 이사였던 고코는 누구보다도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대동아공영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대정익찬회는 대동아공영권을 명분으로 전쟁 체제를 강화해 간간 정치 조직이었고, 제국협력회는 조선인들을 일본의 전쟁 수행에 동원하고, 황민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 슬로건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미쓰비시와 같은 군수 기업들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강제 노동과 자원 약탈을 통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며 침략 전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취했다.

따라서 고코의 진술은 의도된 거짓 진술로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남양 제도와 일본 간의 무역 촉진”으로 축소한 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은폐하고, 이는 일본의 자원 침탈 및 군사적 지배 의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은 경제 차원에서 부족한 원자재 확보에만 관심이 있어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추구했을 뿐이라는 논리로 전쟁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 고코 기요시의 국제검찰국 심문조서에 나타난 그의 진술을 통해 그의 전쟁범죄와 역사 인식을 역사적 사실과 교차 분석하며 심층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고코의 전쟁범죄는 일본 제국의 전시 정책을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이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는 식민지와 점령지의 자원 및 불법적 노동력 착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취한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그는 산업의 군사화와 전쟁 수행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인물이다. 그는 국가총동원법위원회 이사, 제국 협의회 이사, 대정익찬회 및 도조 내각의 고문 등의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군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구들은 모두 일본의 전시 체제를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들이었다.

또한, 고코의 전쟁범죄는 전시 경제 정책을 주도적으로 전환하면서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자원과 노동력 수탈을 위한 통제와 강제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취한 데 있다. 침략 전쟁을 통해 기업은 강제노동과 자원 수탈을 정당화할 수 있었고, 막대한 이윤을 취할 수 있었다. 고코는 일본의 전쟁 경제를 설계하고 실행한 인물로, 자원 및 노동력 착취를 통해 침략 전쟁을 지원한 전쟁 범죄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미쓰비시가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행한 강제 노동과 자원 약탈은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고코는 단순한 기업 경영인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침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전시 정책과 경제정책을 주도한 인물이자 강제노동과 자원 약탈이라는 전쟁범죄를 범한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고코의 역사 인식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책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며 전쟁과 경제적 수탈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전형적인 역사 왜곡의 모습을 보여준다. 고코의 진술은 일본의 만주 점령이 일본보다 만주 자체에 더 큰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만주 개발을 일본의 경제적 기여로 포장했다. 그러나 만주의 경제건설은 일본의 군사적 필요와 전쟁 준비

를 위한 것이었으며, 자원과 노동력의 착취로 인한 만주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모든 개발 혜택은 일본과 기업에게 돌아갔다.

또한, 고코는 중일전쟁이 일본 군부의 계획이 아닌 우발적 “모멘텀”의 결과였다고 주장하며 전쟁의 불법성과 도덕적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중일전쟁은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 철저히 준비한 전략적 침략의 결과로, 자원의 확보와 군수 경제 강화를 목표로 계획된 전쟁이었다.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자원을 약탈하며 군수 산업을 확대한 일본의 침략 전쟁은 고코의 “모멘텀” 주장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고코의 전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다.

무엇보다 고코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단순히 무역 촉진으로 축소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과 전쟁 책임을 은폐하려 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서구 식민주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침략 전쟁과 지배를 정당화한 군국주의 슬로건이었다. 이 슬로건은 일본의 아시아 지배를 강화하고,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전쟁 체제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다. 고코의 진술은 만주와 중국,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일본 군부와 미쓰비시를 포함한 군수 기업들이 계획적으로 자원 약탈과 강제 동원을 통해 침략 전쟁을 수행한 불법성을 부정하기 위해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코의 진술은 국제검찰국이 당시 수집한 기업 정보와 고코 개인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거짓이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도쿄재판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 앞에 일본 제국의 침략과 전쟁을 뒷받침한 경제 전범, 전범 기업인들에 대한 단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범 기업인의 책임 규명에 실패했다. 이는 당시 일본 경제 재건을 우선시한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되어 심문받았던 기업인들 대부분은 불기소, 석방되어 일본의 정치, 경제계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심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국제검찰국에 의한 심문에서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를 입어야 했던 피해국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시점에서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부재했던 도쿄재판의 국제검찰국

조사는 일본 내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과 식민지 문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경제 전범 기업인들에 대한 면죄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질 자원 수탈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게 만들었고, 이는 역사 왜곡의 토대가 되었다.

도쿄재판의 경제 전범 단죄 실패는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전후 번영을 누리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는 전후 책임 불이행의 현실로 이어졌다. 이는 현재까지 한일 간의 갈등으로 작용하면서 진정한 화해와 신뢰 구축을 방해하고 있다. 한일 간 진정한 역사 화해를 위해서라도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는 전쟁범죄의 진실을 직시하고 전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일본 전범 기업들의 전쟁범죄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전후 책임을 국제사회 속에 다하도록 하는 촉구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参考文献>

- 박영준(2023) 『미국과 일본 간 태평양전쟁 개전과정 재조명, 1906-1941: 패권 전쟁 발발의 다층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63-2 pp.110-111
- 안재익(2023) 『중일전쟁의 개전과 1930년대 동아시아 국제정치』 『일본역사연구』 pp.160-164
- 윤현명(2021) 『중일전쟁기 일본 육해군의 임시군사비 전용 문제 분석-제국의회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군사』119 pp.83-89
- 清瀬一郎(2002) 『秘録 東京裁判』 中央公論新社 p.61
- 宇田川幸大(2018) 『考証 東京裁判: 戦争と戦後を読み解く』 吉川弘文館 pp.31-32
- 荒井信一(2005) 『戦争責任論-現代史からの問い』 岩波書店 p.210
- 日暮吉延(2008) 『東京裁判』 講談社現代新書 pp.292-294
- _____ (2018) 『東京裁判と国際政治』 『外交史料館報』31 pp.1-5
- 田中利幸(2013) 『再論 東京裁判: 何を裁き何を裁かなかったのか』 大月書店 p.111
- デイヴィッド・コーエン, 戸谷由麻(2018) 『東京裁判「神話」の解体』 ちくま新書 p.216
- 矢野久(2008) 『日本の植民地労働者の強制労働』 『三田学会雑誌』100-4 pp.115-116
- Barnhart, M.A. (1987) *Japan Prepares for Total War: The Search for Economic Security, 1919-1941*. Cornell University Press, pp.64-90
- Bisson, T. A. (1945) "The Zaibatsu's Wartime Role." *Pacific Affairs*, 18(4), pp.355-368
- Bix, H. P. (1972)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Manchurian Economy, 1900-31." *The China*

- Quarterly*, 51, pp.425-443
- Comyns-Carr, A. S. (1949) "The Tokyo War Crimes Trial." *Far Eastern Survey*, 18(10), pp.5-6
- EmerO'Dwyer (2017) *Japanese Empire in Manchuria*. Oxford Research Encyclopedias, Asian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p.11
- Gordon, D. M. (2006) "The China-Japan War, 1931-1945."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70(1), pp.139-142
- HAUXHURST, H. A., Cunningham, O., Wennerstrum, C. F., & Brand, J. T. (1948) FORUM ON WAR CRIMES TRIALS." *Proceedings of the Section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pp.32-35
- Kluger, B. F. (1971) "The Nuremberg Trials and the German Industrialists." *Journal of Modern History*, 43(4), pp.651-666
- Lee, S. H. (2015) "The Japanese Empire at War, 1931-1945."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World War II*, pp.39-45
- Ratner, S. R. (2001) "Nuremberg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Yale Law Journal*, 111(2), pp.443-527
- Yukiko Kuramoto (201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Manchuria: Japan's Colonial Economic Development Policy." *紀要社会学・社会情報学*, 第28号, p.76
- National Diet Library. (1945).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 SWNCC 150/4.
-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1945, November 6). *Apprehension of Suspected War Criminals*. SCAPIN-243.
- Department of State. (1952, August 7).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With Respect to Japan*. NSC 125/2.
- Bombing Survey. (1945~1946) *Interrogation of Goko Kiyoshi*. Serial No. 381, Report No. 2-r. *Records of the U.S. Strategic Bombing Survey; Entry 43*.
- International Prosecution Section. (1945~1947) *Numerical case files relating to particular incidents and suspected war criminals: Case No. 219, 517, Goko, Kiyoshi*.

접수일: 2025년 1월 9일

심사완료: 2025년 1월 23일

게재결정: 2025년 1월 24일

<Abstract>

**War Crimes and Historical Awareness of Japanese Class A War Criminal
Entrepreneurs through the Tokyo Trials**

—Focusing on Goko Kiyoshi—

This study examines the war crimes and historical awareness of Japanese entrepreneurs implicated as Class-A war criminals, with a focus on Goko Kiyoshi, the former CEO of Mitsubishi Heavy Industries, through interrogation records from the Tokyo Trials. Cross-referencing his testimonies with historical evidence reveals Goko's attempts to downplay his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deny corporate-military collaboration, and glorify Japan's imperialist wars. However, historical records confirm his active role in wartime economic policies, including justifying forced labor and exploiting resources for corporate gain. Goko's distorted historical awareness was aimed at evading legal and moral accountability.

The Tokyo Trials, constrained by Cold War priorities that prioritized Japan's economic reconstruction, failed to hold economic leaders like Goko accountable. As a result, figures such as Goko avoided indictment and punishment, which influenced Japan's postwar reconstruction. This lack of accountability perpetuated the evasion of responsibility, left forced labor compensation unresolved, and deepened Japan-South Korea tensions.

Re-examining the war crimes and responsibilities of Japanese wartime corporations is essential for historical reconciliation. An empirical reassessment of corporate accountability is key to addressing grievances and fostering trust between the two nations.